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
----------	------

발의연월일 : 2024. 7. 9.

발 의 자 : 김문수 · 주철현 · 양문석  
송재봉 · 권향엽 · 조계원  
정을호 · 김준혁 · 민형배  
이성윤 · 박균택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도서·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전라남도 내의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4년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이에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23년 모집정원 20명, 지원자는 10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안 제5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야 함.
- 2)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야 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함.
- 2)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3)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医료를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인력”이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3.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

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도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기준, 지정 요건, 학생정원,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운영)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장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비등의 지원)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학비등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②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사면허의 부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제9조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의무장교로 복무한 기간은 제9조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제11조(의무복무 기관 등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의무복무 기관 및 전문의 교육수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의무복무중인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협력기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협력기관으로한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제14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부속병원) ① 의과대학이 없는 국립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우 해당 국립대학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부속병원을 설립한다.

제15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계획의 수립,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생선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아닌 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학생의 모집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3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